

## 헌정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내란 수괴' 수사 '초읽기'

김용현 구속영장 '尹대통령 국헌 문란' 적시  
檢, 최종 '정점' 대통령으로 수사무게추이동  
계엄 선포·국회 점령·체포지시 등 혐의 검토

▶ 관련기사 2·3·4·5·6면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수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상황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대통령과의 공모를 인정할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수사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서 형법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이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이 답이다'...광주 시국기도회 10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YMCA 무전관에서 열린 광주전남기독교협의회 비상계엄·탄핵 무산 시국기도회 참석자들이 '윤석열 구속'과 '탄핵이 답이다'란 피켓을 들고 있다. /김애리 기자

포고령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이번 사태의 최종 '윗선'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검찰이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 수하를 부려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관련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계엄 선포를 강행한 점, 국회 통과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부터 헌법상 계

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포고령 발표를 지시한 것 등이 핵심 혐의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위법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지도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 선포 이후에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 역시 핵심 혐의로 검토될 공산이 크다.

특히 계엄 선포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과격군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황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씩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여사령관에게 "무엇을 도우면 되냐고 물으니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이재명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게 홍 전 차장의 주장이다.

검찰은 연일 관련자들을 불러 고강도 수사를 벌이며 김 전 장관, 윤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기초 수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자배적인 시각이다. 내란죄를 규정하는 형법 87조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줄일 수 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영장실질심사 포기 입장을 밝혔다. /김재정 기자·연합뉴스

## 673조 규모 野 수정 예산안, 사상 첫 국회 의결

감액 4조1천억·증액 0원

검경·특활비 전액 삭감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수정을 거쳐 4조1천억원 감액만 반영된 총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예산안이 야당의 단독 수정 이후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2025년도 정부예산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예산안의 경우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대로 확정된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

리한 수정 예산안이다. 수정 예산안은 정부 원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을 삭감했다. 반면, 증액은 0원이다.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예산 항목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수정 예산안은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천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천100만원)·특활비(80억9000만원), 감사원 특정비(45억원)·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천만원) 등이 모두 삭감됐다.

이와 함께 4조8천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천억원으로 절반을 줄였다.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도 5천억원 감액했다.

정부안에서 505억원을 반영한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은 497억원(98.4%)이, 416억원을 책

정한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55.0%)이 각각 수정안을 통해 감액됐다.

정부·여당은 이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 3천억원 등 총 1조8천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조6천억원과 대왕고래 예산을 복원하는 내용의 증액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1조원 규모 확대,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등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김진수 기자

희망2025나눔캠페인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광주전남을 가치있게!

성금접수 계좌

광주 사랑의 열매 : 053-107-999990 (광주은행)  
광주시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 사랑의 열매 : 301-4000-3000-01 (농협은행)  
전라남도공동모금회

'제5회 광주매일신문 관광 대상' ▶ 10·11·15면

## '비상계엄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 국회 통과

대통령·총리·김용현 등 수사대상

'12·3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국회가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적시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애초 상설특검 후보자의 경우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민주당이 2명씩 추천한 위원이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 따라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 2명에 대해 국회 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김진수 기자

제12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당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 할 기회!

Redesign your life!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 제12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요강

- 지원자격** 기업경영진 및 관리자, 지자체장 및 의원, 기관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계 전문가 등
- 모집인원** 00명 내외
- 교육기간** 2025년 3월 25일(화) ~ 2025년 12월 중강(연 16회)
- 강의시간** 격주 화요일 오후(7시~8시30분, 6시부터 식사)
- 강의장소**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 전형방법**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세금계산서 요청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수강료 : 380만원(부가세 포함)
  - 입금계좌 : 광주은행 (016-107-391900 : (주)광주매스컴)
  - 접수마감일 : 2025년 3월 14일(금)
  - 문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650-2079)
  -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박수홍 소장 리안경제연구소	 김재호 교수 전남대학교대학원	 권대중 교수 부용산대학원	 문일주 교수 ASSIST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재희 회장 민족문화연구원	 오정혜 국악인	 이승재 영화평론가	 임진모 음악평론가
 최윤희 대표 2M커뮤니케이션	 한다혜 박사 서울대학교 소치학박사		